

2017년 서울시 9급 사회 기출문제 해설 (1)

장수원 | 박문각남부고시학원

1. (가)와 (나)는 서로 다른 유형의 법치주의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(가)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라고 볼 수 없다. 절대 왕정 시대의 법은 곧 왕의 의지를 의미하였고 중국의 법가사상은 법을 전제 군주의 통치 수단으로 보았다.

(나)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고,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의미를 지니므로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에 해당한다. 여기서 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통해 법률로 구체화되므로, 법은 곧 국민의 뜻으로 보았다.

- ① (가)의 논리는 독재 정부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다.
- ② (나)의 논리는 ‘악법도 법이다.’라는 주장을 지지한다.
- ③ (가)는 자연법사상, (나)는 실정법사상에 입각한 것이다.
- ④ (가)와 (나)는 모두 정치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한다.

[정답] ①

[출제단원] 법과정치 - I. 민주 정치와 법

[출제영역]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

[해설]

(가)는 형식적 법치주의, (나)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.

- ① (O)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였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. 즉, 법치주의를 형식적인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할 뿐, 통치의 정당성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. 따라서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.
- ② (X) ‘악법도 법이다.’라는 법언은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.
- ③ (X) 실정법 사상이란 국가에 의하여 제정된 법만이 인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법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사상입니다.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고 실제로 국가에 의해 제정된 법만을 법으로 인정하는 사상이므로 형식적 법치주의와 관련됩니다. 반면 자연법 사상이란 모든 시대와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영구불변(永久不變)의 법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사상으로 자연법이 실정법 위에 있으며 실정법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. 따라서 실정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인 자연법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자연법 사상은 실질적 법치주의와 관련됩니다.
- ④ (X) 실질적 법치주의는 정치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강조하지만 형식적 법치주의는 정치권력의 합법성만을 강조합니다.

2.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조항이다.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?

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.
 제53조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,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.
 제62조 ① ㉠ 국무총리 . ㉡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 제66조 ① ㉢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,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.

- ① ㉠은 국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말한다.
- ② 국회는 ㉠ 또는 ㉡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
- ③ ㉢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비상 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갖는다.
- ④ 헌법 제52조, 제53조 ②, 제62조 ①은 의원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.

[정답] ②

[출제단원] 법과정치 - II.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

[출제영역]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

[해설]

정부 형태와 관련하여 제시된 헌법 조항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- 제52조 :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→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합니다.
 - 제53조 ② :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→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합니다.
 - 제62조 ① :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·발언권 →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합니다.
 - 제66조 ① :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인 국가 대표권 →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합니다.
- ① (X)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. 국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수상(총리)을 맡는 경우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.
- ② (O)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인정(헌법 제 63조 ①)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이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합니다.
- ③ (X)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, 긴급 명령, 계엄 선포 등과 같은 비상 조치를 갖습니다. 그러나 국회 해산권을 갖지는 않습니다.
- ④ (X) 헌법 제52조와 제62조 ①항은 의원내각 요소에 해당합니다. 하지만 제53조 ②은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합니다.

3. 다음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의 선거 결과이다.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(단위 : 명)

지역	인구	국회의원 수
A시	89만 3,950	3
B시	29만 2,849	2

- ① 갑국의 선거구제는 입후보자의 인물 파악이 쉽다.
- ②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평등 선거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.
- ③ B시 유권자 1표는 A시 유권자 1표의 1/2의 가치가 있다.
- ④ 선거구를 공정하게 획정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법정주의, 인구 대표성,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.

[정답] ③

[출제단원] 법과정치 - II.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

[출제영역] 소선거구제의 특징과 민주 선거의 원칙

[해설]

- ① (O) ‘소선거구제’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. 따라서 영향력 있는 거대 정당의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후보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. 이로 인해 유권자들이 입후보자의 인물 파악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.
- ② (O) A시에서는 3개 선거구에서 유권자 89만 3,950명이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고, B시에서는 2개 선거구에서 유권자 29만 2,849명이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. 이를 통해 1명의 유권자의 표의 가치는 A시에서 대략 $1/30$ (=3/89만 3,950)의 가치, B시에서는 대략 $1/15$ (=2/29만 2,849)의 가치를 가집니다. 따라서 A시에서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B시에서의 유권자의 표의 가치에 비해 낮습니다. 이는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됩니다.
- ③ (X) ②번 해설에서 알 수 있듯이 B시 유권자 1표의 가치는 A시 유권자 1표의 가치에 비해 대략 2배의 가치를 가집니다.
- ④ (O) 공정한 선거구의 획정을 위해서 선거구와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1:1에 가까워야 함을 강조하는 인구 대표성, 지역이나 행정 구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지역 대표성, 게리맨더링의 방지를 위해 국회에서 공정하게 선거구를 법률로 획정해야 함을 강조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고려해야 합니다.

4. 표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쟁점에 대한 A, B 정당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쟁점	A당 입장	B당 입장
헌법 개정 논의	시기상조이므로 반대	㉠ 개헌안 발의
㉡ ○○정책에 대한 국민투표	찬성	반대
㉢ ○○법 개정안 재의	㉣ 본회의 표결 처리	국민적 합의 필요

- ① ㉠은 국회 재적의원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.
- ② ㉡은 국회 재적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실시 가능하다.
- ③ ㉢은 국회에서 부결된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.
- ④ ㉢이 ㉣을 통과하여 이송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.

[정답] ④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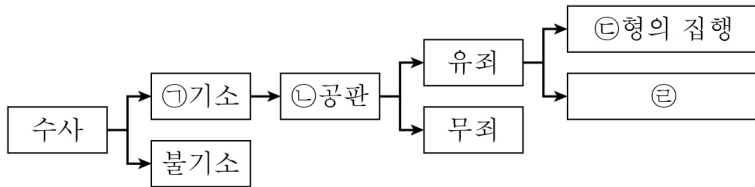
[출제단원] 법과정치 - III. 우리나라의 헌법

[출제영역] 헌법 개정 절차, 법률 제·개정 절차

[해설]

- ① (X)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.(헌법 제 128조 ①항)
- ② (X) 특정한 정책이 외교·국방·통일·기타 국가안위(國家安危)에 관한 중요정책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.(헌법 제72조)
- ③ (X) 법률안에 대한 재의는 국회에서 부결된 법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④ (O)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재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는 본회의에 재의를 붙일 수 있고 재의시에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. 재의결로 법률안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합니다. 참고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합니다.(헌법 제 53조 ②, ④, ⑤항)

5. 그림은 형사절차를 나타낸 것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

- ① ㉠은 수사관이 할 수 있다.
- ② ㉡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기 시작한다.
- ③ ㉢단계에서의 지휘권은 판사가 갖는다.
- ④ ㉣에 해당하는 제도로는 집행 유예가 있다.

[정답] ④

[출제단원] 법과정치 - V. 사회생활과 법

[출제영역] 형사 절차의 이해

[해설]

- ① (X)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 즉, 공소제기는 검찰이 독점합니다.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. 참고로 수사관이란 범죄의 수사를 맡은 관리로 경찰청 및 검찰청에 소속된 구성원들 중 일부입니다.
- ② (X) 수사부터 공판까지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습니다.
- ③ (X) 법원에 의해 확정된 형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합니다.
- ④ (O) 집행유예는 유죄의 판결(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)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.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선고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.

6. 다음의 자료 수집 방법 A~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 (단, A~D는 질문지법, 실험법, 참여관찰법, 문헌연구법 중 하나이다.)

항목	자료 수집 방법
질적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사용된다.	A
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필요로 한다.	B
낮은 수거율과 무성의한 응답이 나타날 수 있다.	C
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모두 활용 가능하다.	D

- ① A는 통제의 정도가 가장 높아 신뢰도가 높은 연구 방법이다.
- ② B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연구 방법으로 활용도가 높다.
- ③ C는 문맹자에게도 실시하기 용이한 자료 수집법이다.
- ④ D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자료 해석 과정에서 개입될 우려가 있다.

[정답] ④

[출제단원] 사회문화 - I. 사회·문화 현상의 탐구

[출제영역] 자료 수집 방법

[해설]

A는 주로 질적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참여관찰법, B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필요로 하는 실험법, C는 낮은 수거율과 무성의한 응답이 나타날 수 있는 질문지법, D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 모두 가능한 문헌연구법에 해당합니다.

- ① (X) 통제의 정도가 가장 높아 신뢰도가 높은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관찰법이 아닌 실험법입니다.
- ② (X) 실험법은 방법론적 일원론 즉, 사회·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과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실증적 연구 방법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 주로 활용됩니다.
- ③ (X) 질문지법은 연구자가 미리 작성한 질문지를 조사 대상자에게 기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므로 문맹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.
- ④ (O) 문헌 연구법에서 문헌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고, 이것으로 인해 연구 결과의 신뢰성도 떨어집니다. 또한 문헌 자체의 신뢰성뿐만 아니라, 문헌 해석의 신뢰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즉,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.